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6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6년 12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의 현주소

Child Rights in Korea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굿네이버스의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아동권리 지표 및 아동권리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태 및 수준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이행 증진을 위한 제언을 공유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굿네이버스에서 2016년 수행한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보장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아동권리지수는 광역시와 광역자치도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은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 및 학년 간의 격차는 종합적인 아동권리 지수 뿐 아니라 아동권리의 영역별(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지수에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이행 증진을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예산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아동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 청소년기의 권리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아동권리에 기반한 종합적인 데이터의 지속적 생산이 필요하다.

Situation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 비준 이후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의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이념 및 관련 규정의 국내 법적 • 제도적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관계부처 합동, 2015)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 • 청소년 권리 증진의 노력을 담은 제5 • 6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2016년 현 시점, 대한민국 아동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 권리경험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6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²⁾ 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권리 수준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16개 시 • 도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8,91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①생존권³⁾, ②발달권⁴⁾, ③보호권⁵⁾, ④참여권⁶⁾, 4대 권리 영역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을 종합적,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지역 • 학년으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아동 권리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피고자 하였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4대 권리별로 아동권리 실태를 살피고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학년 간에서 나타난 결과에 집중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6년 현재)이 비준
- 2)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경험(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결과(인지, 사회정서, 인성, 행복)의 체계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고, 16개 시 • 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8,915명(총17,830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년 주기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
- 3)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는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4)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 5)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6)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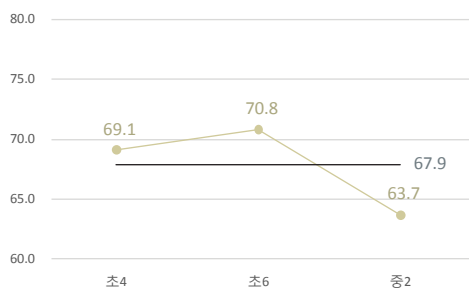
아동권리지표로 본 아동 권리의 실태

생존권(Right to surv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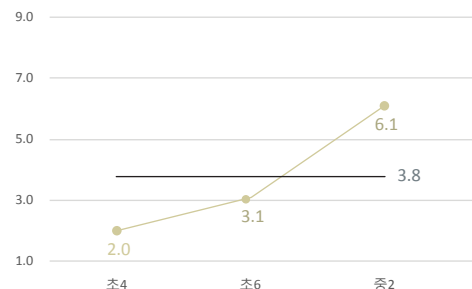
생존권 지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학년 간 결과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생존권 경험이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의 경우 일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은 69.1%, 초등학교 6학년은 70.8%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2학년은 63.7%로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중학생의 규칙적인 식사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가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섭취 하는 아동의 비율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은 각 2.0%, 3.1%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6.1%로 초등학교 4학년의 약 3배에 달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를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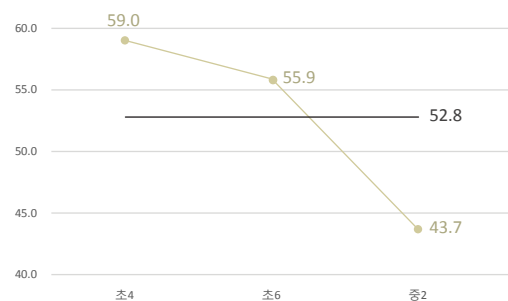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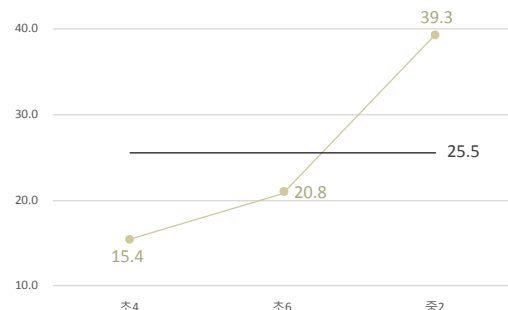
둘째, 달리기, 축구, 농구, 줄넘기 등 숨이 가쁠 정도의 신체활동을 주 3일 이상 하는 아동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은 각 59.0%, 55.9%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2학년은 43.7%로 학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주 3일 이상 하는 아동의 비율



셋째, 특히, 수면시간 결과에서 학년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4학년은 15.4%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39.3%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 10명 중 약 4명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4학년 10명 중 약 1.5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중학생이 초등학교보다 생존권 보장 경험이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비율



발달권(Right to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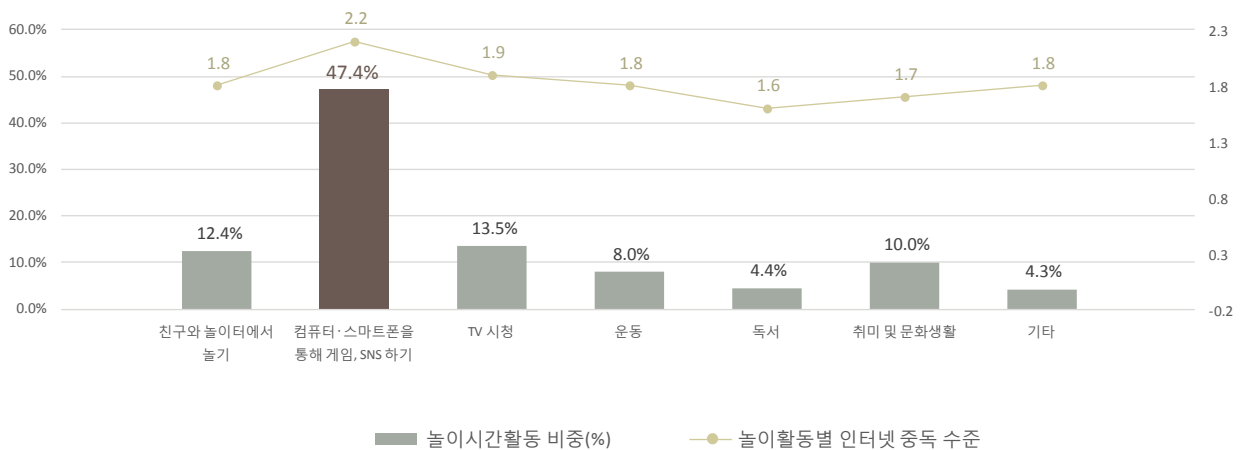
발달권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놀이'에 관한 것이다.

놀이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19.0% 정도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4학년의 15.0%, 초등학교 6학년의 18.9%, 중학교 2학년의 23.0%가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놀이 및 휴식시간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놀이 및 휴식시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놀이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아동의 47.4%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SNS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TV시청이 13.5%로 나타나, 아동의 10명중 6명이 전자매체(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TV)를 통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선숙 · 안재진, 2015). 이는 청소년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정현, 2011).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지속적 노출은 인터넷 중독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본 조사에서 전체 아동의 놀이 유형 응답 그룹별로 인터넷 중독을 측정한 결과 컴퓨터 ·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SNS를 한다고 응답한 아동그룹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중독 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 ~ 로 응답한 4점 척도로 8개 항목의 평균 점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놀이시간활동별 인터넷 중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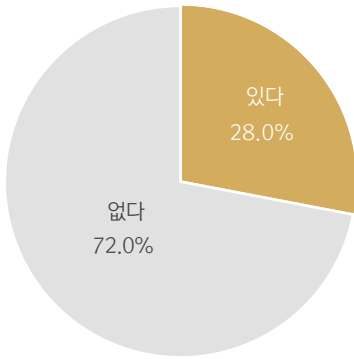
보호권(Right to protection)

보호권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는 '가정 내 보호'와 '가정 외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정 내 보호' 이슈에서는 부모(또는 가족)에 의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관한 16개 아동학대 지표 중 1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부모(또는 가족)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28.0%로 나타났다. 즉, 이는 100명 중 28명의 아동이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수치인데, 우리는 100명중 28명의 아동이 '가정 내에서' 월 1회 이상 학대에 '지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월 1회 이상 지속적 아동학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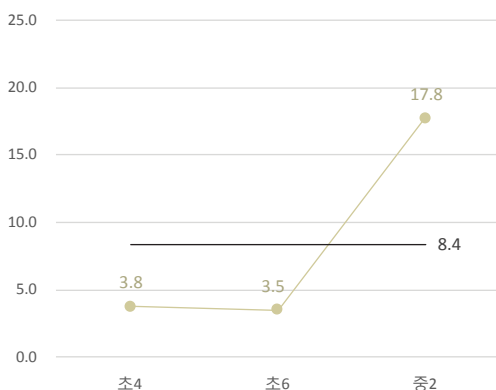


16개 아동학대 지표

신체 학대	나를 꼬집으셨다.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셨다.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셨다.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셨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두들겨 패셨다.
정서 학대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 겠다고 하셨다. 말로는 때리겠다고 위협 하셨지만, 실제로 때리시지는 않으셨다.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셨다.
방임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두셨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셨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술에 취해 계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시지 않으셨다.

다음으로 '가정 외 보호' 이슈에서는 가정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학교'에 집중하여 '학교 내 체벌'을 다루고자 한다.

학교 내 체벌 경험



우리나라는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후 체벌을 전면금지하도록 하였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 아동의 8.4%가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의 체벌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2학년(17.8%)의 경우 학교 내 체벌 경험이 초등학교 6학년(3.5%) 보다 약 5.1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금지에 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내 체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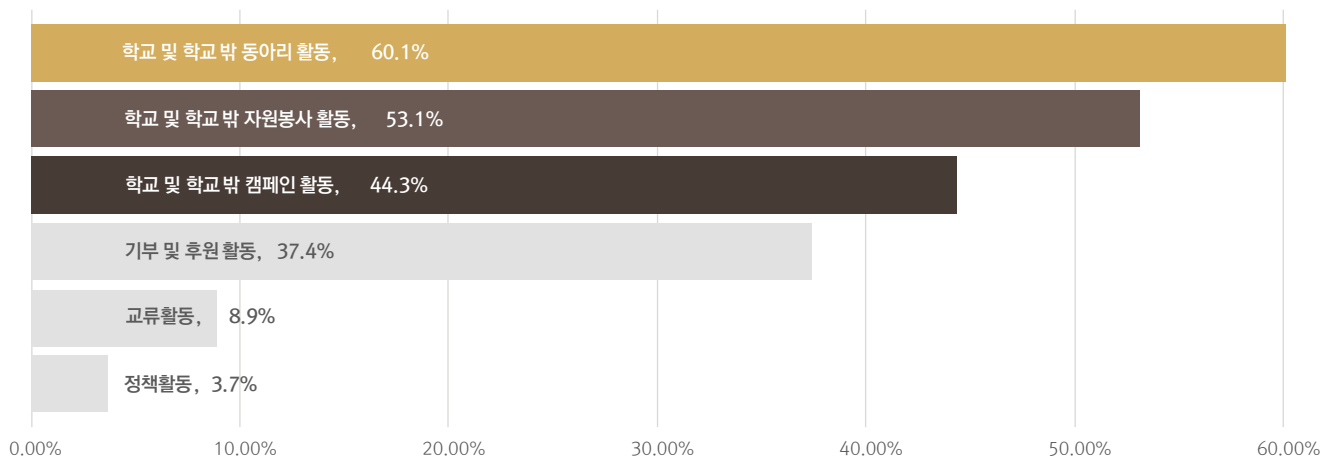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법률상의 절차,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있지 않은 것, 그리고 학교운영 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체 아동에게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정책 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 참여 60.1%, 캠페인 활동 참여 44.3%, 자원봉사 활동 참여 53.1% 등 대부분의 참여 활동은 두 자리 수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나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자치위원회 등의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100명 중 약 4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계속 되고 있는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화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전국의학학생들이 연이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동·청소년의 사회 문제,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여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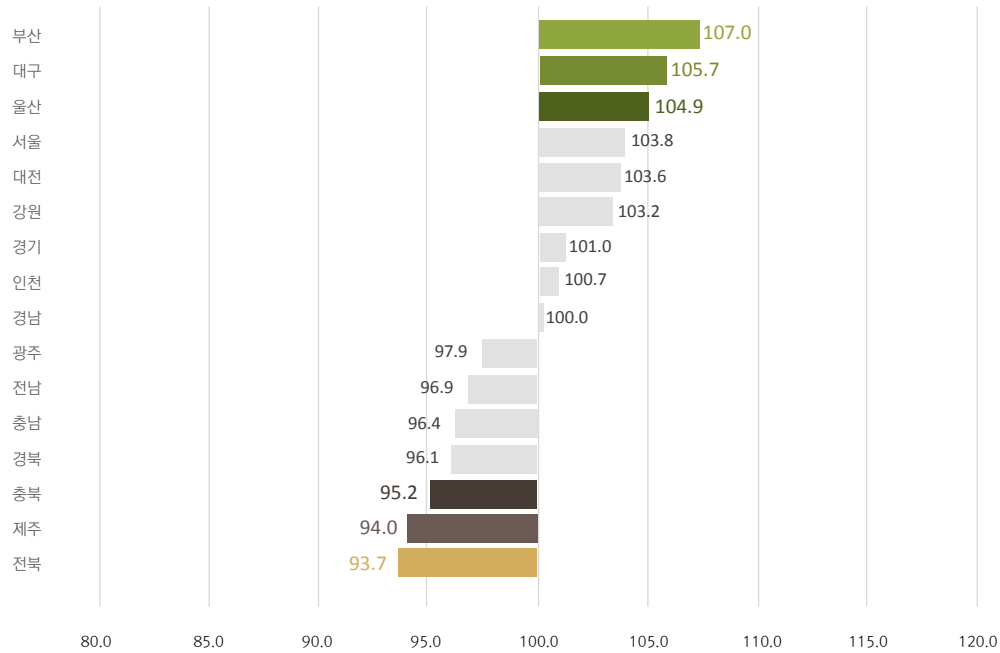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아동권리지수 ⁷⁾

16개 시·도의 아동권리지수를 비교한 결과 대도시로 구성된 광역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도 간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지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종합지수로 부산이 107.0점으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부터 5위까지는 대구, 울산, 서울,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위권에 속하는 6위에서 10위 지역에는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광주가 있었으며, 11위에서 16위의 하위권에는 전남, 충남, 경북, 충북, 제주 전북이 속하였다. 이렇듯 상위권은 대도시가 포함된 광역시가 모두 차지하였으며, 하위권은 중소도시가 포함된 광역자치도가 차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4대 권리별로 지역 간 비교했을 때도 반복되어 나타났다.

7) 아동권리지수: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로 산출 (아동권리지수는 100점 평균으로 변환하여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에 '100점 이상: 아동권리수준이 평균수준이거나 평균수준보다 높다', '100점 미만: 아동권리수준이 평균수준 보다 낮다'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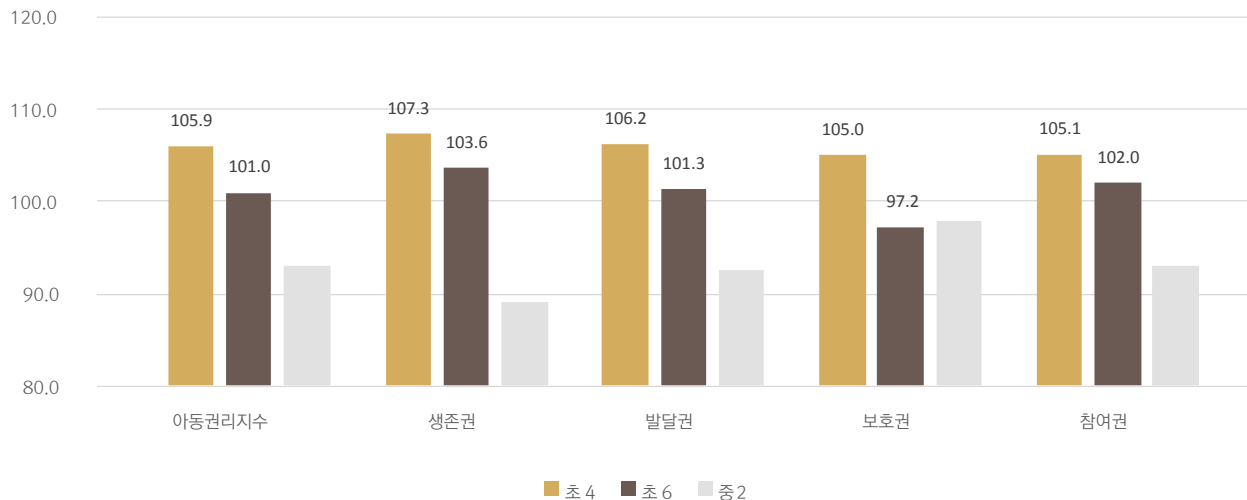
아동권리지수 지역별 종합결과



다음으로 학년 간 아동권리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권리지수와 각 4대 권리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는 초등학교 4학년이 10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101.0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학교 2학년이 93.1점으로 가장 낮았다.

초등학교 4학년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그 뒤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잇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학년별 종합 아동권리지수와 4대 아동권리지수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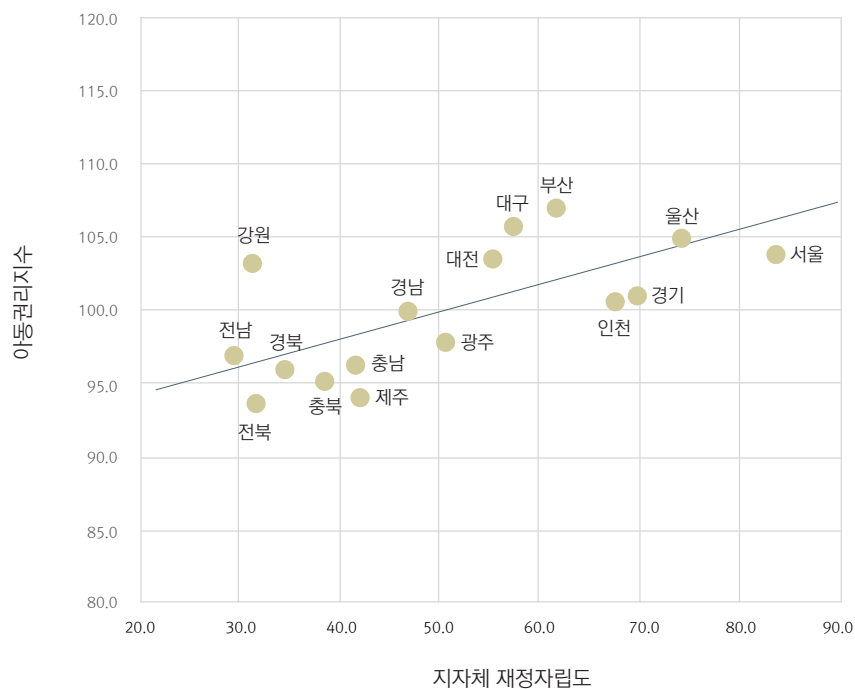
아동권리지수는 왜 지역 간 차이가 나는가? - 아동의 경제적 환경 중심으로

아동권리지수가 대도시와 소도시 간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권리지수와 아동가구의 소득, 교육복지지원비율, 교육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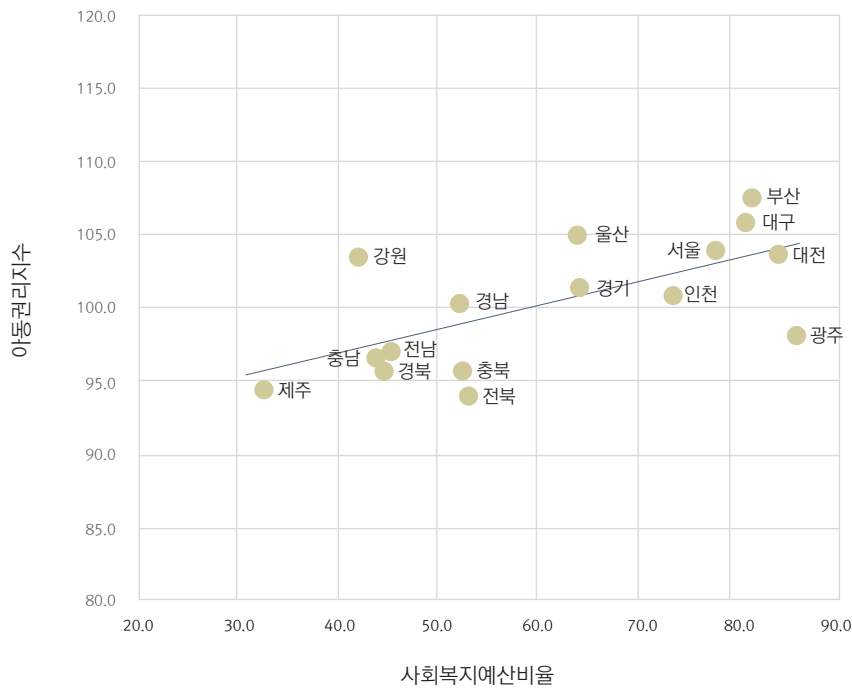
소득, 교육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아동권리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적인 권리경험에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를 지역 내 아동권리지수로 변환했을 때, 가정의 경제적 환경보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사회복지 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은 아동의 권리 경험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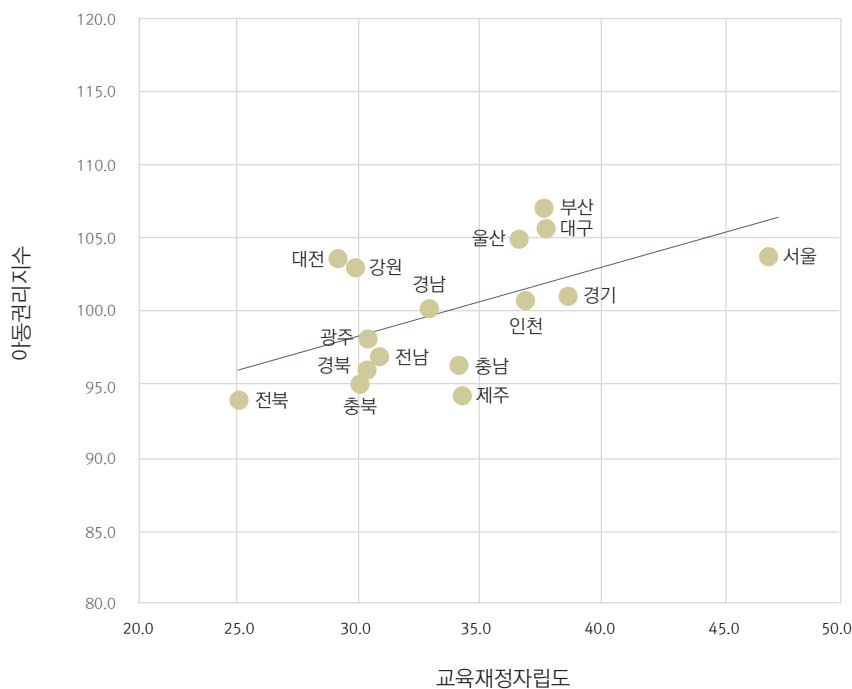
아동권리지수와 지자체 재정자립도 간 상관관계



아동권리지수와 사회복지예산비율 간 상관관계



아동권리지수와 교육재정자립도 간 상관관계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동은 누구나 다 동일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이 태어나거나 성장하는 곳에 따라 권리보장의 환경이 큰 차등 없이 마련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결국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보장 환경마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권리보장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마련과 예산투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 요청에 맞추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지수는 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향하는가? - 중학생의 권리 보장 경험의 결핍

‘중2병’이라고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이 시기의 청소년은 2차 성징으로 인하여, 신체적·생리적 변화의 급격한 변화를 겪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다(김명일, 고아라, 임경미, 2013). 이러한 사춘기적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 중학생은 중2병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이 되었다.

1991년부터 2천명의 뇌를 분석한 미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의 제이 기드(1999)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뇌는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통해 뇌가 성숙해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황판단, 타인의 감정 이해 등을 위한 고차원적인 뇌발달을 위해서는 이 시기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의 중학교 2학년의 권리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보다 결핍이 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학교 2학년은 아동권리지수의 종합 점수 뿐 아니라 4대 권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생존권 지수의 학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2학년은 초등학교 4·6학년에 비해 규칙적인 식사비율이 낮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비율은 높으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체적 활동의 비율은 낮고 수면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삶 전체가 학업과 결부되어 학업이 아동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을 통한 고입, 대입이 아동의 권리 보장의 결핍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겠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며 그들의 권리는 뒷전으로 미루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며, 어른들의 ‘잣대’로 청소년 시기를 단순히 ‘중2병, 문제아’ 집단으로 명명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 경험에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Recommendations |

아동 예산의 확대 및 중앙정부 주도의 아동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 경험의 지역 격차가 발생 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정부정책은 ‘예산’의 투입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예산’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정책들이 활발히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2005년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의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 확보조차 어려워진 실정이다. 하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이미 지역별 생산성, 인구 등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아동권리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도시에 대한 아동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등 이미 지역별 생산성, 인구 등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 아동권리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도시에 대한 아동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 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을 배정하고, 이를 위하여 분야별 지자체 예산의 필요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지출(2013년 기준)은 GDP 대비 1.13%로, OECD 국가의 평균 2.14%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33개 회원국 중 30위로 나타났다(OECD 홈페이지). 우리나라 아동 1인에 대한 복지비용은 노인 1인에 대한 비용의 1/8 수준이며,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육을 제외하게 되면 아동복지비용은 너무나 협소하다(윤혜미, 2015).

아동예산 만큼은 아동 투자적 관점에서 아동 예산의 양적 확대는 물론 중앙정부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 모든 아동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 경험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권리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의 권리보장 경험의 결핍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결과 상 중학생의 불균형한 영양, 충분하지 못한 수면시간, 빼앗긴 놀 권리, 학교 내 체벌 등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은 ‘중2병’을 가진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규정하며 그저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학생의 이러한 권리보장의 취약성은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교육시스템과 이로 인한 학업부담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소년=공부’라는 공식으로 인하여 그 동안 어른들은 청소년기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 경험은 아동이 속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동이 속한 환경에 따라 아동의 권리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은 권리 경험의 지역 차이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 더욱이 환경과 권리경험은 아동의 발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동권리에 기반한 종합적인 데이터의 지속적 생산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주요지표의 통계는 아동권리 이행 수준을 보여주고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자료수집 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며, 협약의 분야별로 구분된 자료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통계가 부처나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생산 및 발표되고, 활용되고 있다. 아동권리 관련 주요지표가 개발되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졌지만, 종합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거나 활용되는 부분에서 미흡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에 수행된 본 조사연구는 아동권리 지수를 통해 아동권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아동권리 경험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 환경과 결과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동권리에 기반한 조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동권리 실태와 수준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지속적으로 조사 및 데이터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권리를 포괄하면서도 시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아동권리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루어져 한다. 특히, 본 조사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아동권리 경험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연령에 따른 권리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지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조사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옹호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사회적 감시와 개선 촉구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촘촘한 아동 통계 수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고정현(2011). 인터넷 중독의 이해와 실태 및 해소 방안. 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지, 2011(-), 25-40.
-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 굿네이버스(2016). 대한민국 아동의 현주소, 아동권리지수로 답하다. 2016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 김명일 · 고아라 · 임경미(2013). 초기청소년의 사회참여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1), 71-84.
- 김선숙 · 안재진(2015).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유형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m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51(-), 1-21.
- 윤혜미(2015). 사회투자시각에서 본 한국의 아동복지. 생활과학연구논총, 19(1), 1-16.
- 한국교육개발원(2016).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
- 행정자치부(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 Jay, N. G., Jonathan B., Neal, O. J., Castellanos, F. X., Hong, L., Alex, Z., Tomas caron P., Alan, C. E., & Judith, L. R. (1999). Brain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longitudinal MRI study. Nature Neuroscience, 2(-), 861-863.
- OECD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socialexp/family-benefits-public-spending.htm> 12월 7일 검색